

‘미래먹거리’ 빛가람에너지밸리 기업유치 ‘빨간불’

나주혁신산단 분양률 95% 포화 에너지국가산단도 예타에 발목 용지 부족 직면...공급대책 시급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남구와 나주 일대에 추진 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유치의 핵심 거점인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단기 공급대책 등 지원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전과 지자체가 협력, 에너지 신산업 연관이

업 500개사를 유치해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에 발 빠르게 대응, 나주와 인접한 남구 일대를 중심으로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해 순항 중이다.

지난해 4월 준공된 도시국가첨단산단(48만 5,897.5㎡)은 이미 분양률이 74%를 넘어섰다. 또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한 에너지밸리일반산단(93만2,312㎡)도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전남지역 에너지밸리 기업유치의 핵심 거점인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95%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추가로 기업을 유치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나주혁신산단은 총 192필지(121만3,000㎡) 중 184필지(115만4,000㎡)가 분양됐고, 나머지 8필지(5만9,000㎡)도 예약을 마쳐 사실상

100% 분양이 완료됐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땅 장 공간이 없어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확대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에너지밸리 확대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인근에 추진 중인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산단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중간평가 실시 결과, 통과 기준을 충족치 못해 예타 신청을 포기한 상태다.

이후 나주시가 사업계획을 최초 183만3,000㎡(57만평)에서 119만7,000㎡(36만평)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산단 조성원가를 낮추고 예

타 재추진을 준비 중이지만 결과를 낙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타 통과를 좌지우지하는 산업단지 경제성 분석의 적도가 될 ‘신규투자 입주 예정기업 확보’ 활동이 국내외 경제 환경 악화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그나마 앞서 KDI에 자체 확보한 투자자의향 기업 637개사 리스트를 수요 조사 표본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 수용된 데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올해 어렵게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에너지국가산단 준공까지는 최소 8년이 소요돼 2030년께나 산단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단 용지 부족에 직면한 나주시는 현재 소규모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단 단기공급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농공단지에는 2~

3년 내 산단용지 제공이 가능하고, 30% 이상 토지보상을 마친 남평농공단지의 경우 내년 10월께면 토지사용이 가능해 최대 20여개 기업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시는 국가산단 준공까지 예상되는 최대 8년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 국가산단 대비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민간투자 방식의 산단 개발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나주에너지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산단 계획·지정을 서둘러 곧바로 착공하고, 조성공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30년으로 예상하는 산단 준공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며 “나주시가 산단용지 단기공급 대책으로 농공단지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 차원의 투자유치 활동을 비롯해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왼쪽 세 번째)가 지난 15일 오후 순천대학교에서 순천대학교, 고흥군, 전남테크노파크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순천대-고흥군-전남TP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 업무협약

전남 미래농업의 거점이 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을 위해 전남도와 순천대학교, 고흥군, 전남테크노파크가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순천대학교 총장실에서 순천대, 고흥군,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원활한 정착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영진 순천대 총장, 공영민 고흥군수,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자리했다. 참여 기관들은 스마트팜 관련 청년보육을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과 스마트기자재 업체 유치, 실증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고흥만 간척지 33ha에 총사업비 1,190억원을 들

여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보육은실을 지난 5월 완료한데 이어 기반 조성과 임대형 팜, 지원센터, 실증온실 구축 등은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마칠 계획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인-기업-연구기관의 다양한 기능을 집적화해 농촌에 청년을 유입하면서 농산업의 전후방산업을 동반 성장토록 하는 혁신산업”이라며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도, 필리핀·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청신호

161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

전남도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수출 상담을 진행해 현지 바이어의 호응 속에 계약을 맺는 등 새로운 수출선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15일까지 5일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61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대면

마케팅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기업 5개사와 화장품 등 공산품 3개사가 참여했다.

지난 12일 필리핀 수출상담회에서 2개사가 2건 61만 달러를, 14일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에서 1개사가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필리핀에선 ㈜비더블유코리아가 탈모방지제품, ㈜백건준설이 수탁양용준설선 등으로, 인도네시아에선 경향산업(유)이 보온·보냉단열재로 수출 기회를 잡았다.

이밖에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해

1,918만 달러 상담 성과를 거뒀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봤다. 제품 종류별로 북하북품사업단(주)는 잣갈류, ㈜네이처퓨어코리아는 건강기능식품을, ㈜해농, ㈜골든힐, 완도팜은 식품류를 출품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세계 시장 진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수출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www.hdamis.com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경비용역

청소·미화

소독·방역

현대아미스그룹

현대아미스(주)

한솔엘리베이터(주)

(주)아미스개발

아미스(주)

(주)아미스능력개발원

메인기획협동조합

(주)한솔티엠에스

(주)도곡전기엔지니어링

복지TV호남방송

회장 김우열

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마북동 173-8번지)
T.062)225-1050 FAX.062)463-7300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참여기업 모집

도, 최대 4,000만원까지

오늘부터 3개 분야 신청

전남도는 17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고도화 지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모

집 기간은 18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사업을 바라는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말 사업이 확정된 기업을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 발표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고용 확대와 유지를 위한 것으로, 90개 사내외의 300여 명을 선정한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 비율(40~70%)로 기업별 최대 50명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개발비는 10개 사 내외를 뽑아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조한다.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상품 홍보 등을 지원하므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고도화 지원은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추가 지원해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10개 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오선우 기자